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6년 1월 동향 (제848호)

- ▶ 12월 대비 5.6% 감소(1,162,738건)
- ▶ 국토부, 인천, 전북 무주군, 인천교육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 2월 민원예보로 '배달 음식' 선정,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내실화 등 제시

국민의 소리

No. 848

월간 동향

2026년 1월

01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02 기관별 동향(1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03 민원예보(2월) : 배달 음식 10

01 | 민원 동향(1월)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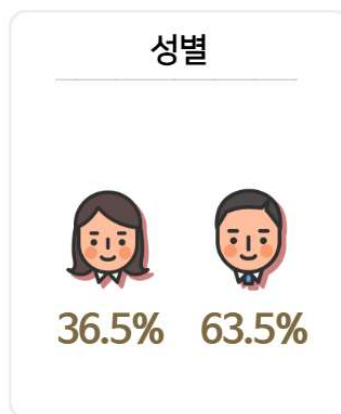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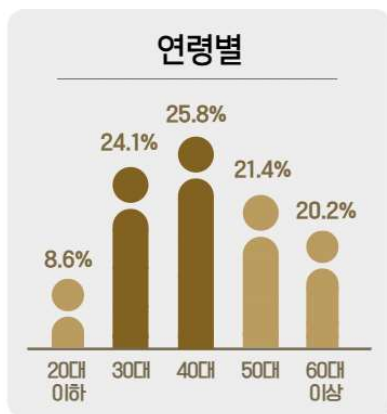
- 2026년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62,738건
- 전월(1,231,274건)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984,906건) 대비 18.1%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서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6.2.2. 10시)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25.8%) 및 30대(24.1%), 성별로는 남성(63.5%)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15.8%), 30대 남성(15.7%), 50대 남성(13.1%)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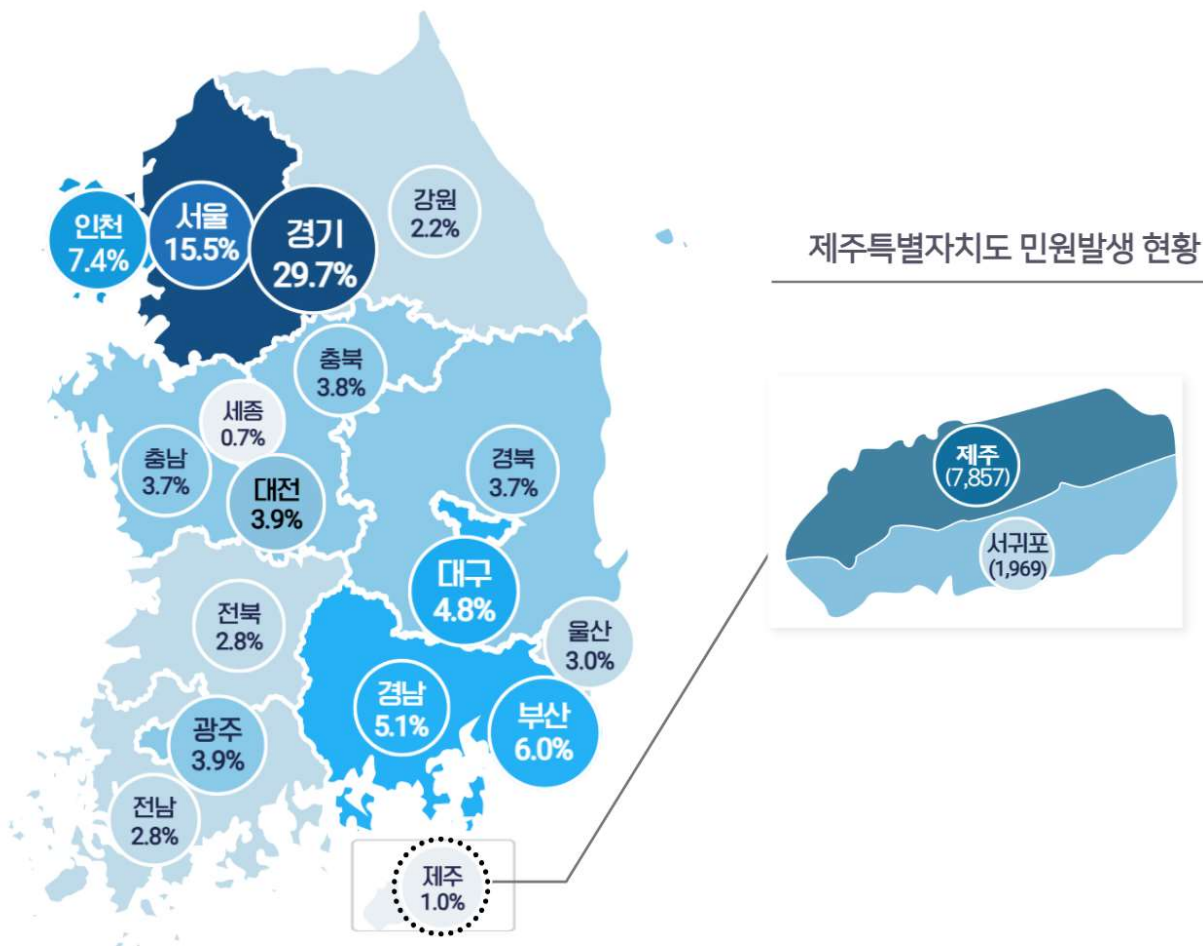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76,746건 대상

지역별 현황

- 경기 29.7%(304,784건), 서울 15.5%(159,736건), 인천 7.4%(75,617건), 부산 6.0%(61,689건), 경남 5.1%(52,431건) 등의 순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1%↑)
- *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민원 증가

1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 신청지역이 확인된 1,027,796건 대상으로, 민원의 처리기관 기준이 아닌, 신청지역 기준임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3.4%)가 가장 많고, 행정·안전(7.8%), 도로(6.8%), 환경(2.8%), 산업·통상(2.5%), 주택·건축(2.2%),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행정·안전	도로	산업·통상	주택·건축	환경	경찰·검찰·법원	보건	수자원
63.0%	8.5%	5.9%	2.9%	2.6%	2.5%	2.1%	1.5%	1.6%
교육	문화	노동	수자원	도시	방송통신	복지	재정	세무
1.4%	1.0%	1.0%	0.9%	0.9%	0.9%	0.8%	0.8%	0.7%
국방	농림·축산	관광	과학기술	세무	체육	해양수산	외무통일	우정
0.6%	0.5%	0.5%	0.4%	0.4%	0.3%	0.3%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15,041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지구 내 소각장 및 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백지화 등 **도시** 분야 증가



도시
42.8% ↑



노동
11.7% ↑



경찰·검찰·법원
8.6% ↑



산업·통상
6.0% ↑



재정
5.9% ↑

감 소



해양수산
36.9% ↓



복지
36.6% ↓



도로
14.6% ↓



방송통신
13.4% ↓



교육
12.5% ↓

주요 민원키워드

- 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 단속 요구, 재개발 추진 요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포트홀 정비
 변전소 신설 반대
 도로시설물 정비
 재개발 쓰레기 무단투기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위례신사선
 불법광고물
 학군조정
 성신여대
 통학구역 유지
 버스노선
 가로등 정비
 인천2호선
 교통법규 위반차량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
 고양은평선
 의료법 위반
 배수로 정비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광고물	1	불법주정차*
2	재개발 추진	2	도로시설물 정비
3	쓰레기 무단투기	3	고양은평선
4	통학구역 유지	4	위례신사선
5	변전소 신설 반대	5	교통법규 위반차량
6	가로등 정비	6	버스노선
7	의료법 위반	7	인천2호선
8	학군 조정	8	도로 제설
9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	9	포트홀 정비
10	성신여대	10	제2경인선

* 장애인 전용구역, 친환경차 전용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불법 주정차 키워드 포함

[신규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일반

④ 검단 ○○단지 ◇◇초 배정 원안 유지 요구 ⑨ ●●지구 호수공원 소각장 설치 계획 백지화 요구 ⑩ 성신여대 학생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 제기

도로 교통

③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 반영 요구 ⑧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등 방지를 위한 제설 요구

02

기관별 동향¹⁾(1월)

중앙행정기관

- 1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75,4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증가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토부, 공정위 등, 감소한 기관은 교육부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국토부	30,110	50,544	67.9%
경찰청	42,949	41,019	-4.5%
고용부	12,004	12,677	5.6%
국방부	6,839	7,218	5.5%
국민권익위	4,358	5,835	33.9%
식약처	5,381	5,548	3.1%
복지부	4,320	4,806	11.3%
행안부	3,955	4,214	6.6%
대검찰청	4,636	4,161	-10.3%
공정위	3,042	4,103	34.9%
과기정통	3,260	3,617	11.05
국세청	2,435	3,230	32.7%
기후부	2,921	3,107	6.4%
법무부	2,129	2,268	6.5%
교육부	4,800	1,750	-63.5%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총리비서실	341	1,045	206.5%
국조실	181	535	195.6%
감사원	157	275	75.2%
국토부	30,110	50,544	67.9%
기획예산처	805	1,117	38.8%
공정위	3,042	4,103	34.9%
국민권익위	4,358	5,835	33.9%
국세청	2,435	3,230	32.7%
보훈부	627	791	26.2%
방통위	374	465	24.3%
공수처	540	647	19.8%
산통부	526	608	15.6%
외교부	476	547	14.9%
조달청	631	724	14.7%
금융위	796	902	13.3%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포함 요구 등(50,544건)
기획예산처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조속한 진행 요구 등(1,117건)
공정위	불공정 거래 행위(허위 광고 등) 신고 등(4,103건)

1) '26.2.2.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지방정부(광역)

- 1월 지방정부(광역) 민원은 총 60,621건으로 전월 대비 14.9% 감소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경기, 인천, 경북 등 4개, 감소한 시·도는 대전, 충북, 서울 등 13개

[지방정부(광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서울	42,304	33,823	-20.1%	충남	747	672	-10.0%
세종	5,684	5,610	-1.3%	전남	604	502	-16.9%
대전	5,572	3,976	-28.6%	전북	555	499	-10.1%
인천	3,424	3,797	10.9%	경북	431	472	9.5%
경기	2,855	3,302	15.7%	제주	482	436	-9.5%
부산	2,520	2,100	-16.7%	경남	454	407	-10.4%
광주	2,385	2,097	-12.1%	강원	412	375	-9.0%
대구	1,359	1,227	-9.7%	충북	480	355	-26.0%
울산	926	971	4.9%	※ 1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가 사례]

인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진행 요구 등(3,797건)

경기

소방시설(소화전 및 비상계단 등) 앞 물건 불법 적치 신고 등(3,302건)

경북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472건)

지방정부(기초)

- 1월 지방정부(기초) 민원은 총 866,089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증가한 지방정부는 경기 평택시, 경기 부천시 등,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전북 무주군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27,134	24,373	-10.2%
충북 청주시	24,552	24,281	-1.1%
경기 성남시	20,560	18,781	-8.7%
경기 화성시	18,193	17,632	-3.1%
경남 창원시	16,482	15,550	-5.7%
경기 고양시	15,229	15,401	1.1%
경기 안산시	15,562	14,617	-6.1%
경기 용인시	15,447	14,510	-6.1%
충남 천안시	14,065	13,728	-2.4%
서울 송파구	15,171	13,110	-13.6%
인천 서구	12,766	12,395	-2.9%
서울 관악구	14,164	12,194	-13.9%
경기 평택시	11,408	12,177	6.7%
경기 부천시	11,488	12,155	5.8%
서울 서초구	15,064	11,729	-22.1%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전북 무주군	91	160	75.8%
경북 청도군	233	391	67.8%
전남 완도군	208	341	63.9%
경북 영덕군	229	338	47.6%
경남 의령군	118	174	47.5%
전북 부안군	452	654	44.7%
강원 동해시	1,166	1,654	41.9%
강원 평창군	426	585	37.3%
전북 진안군	76	104	36.8%
강원 정선군	368	496	34.8%
충북 충주시	2,394	3,173	32.5%
충남 서천군	334	441	32.0%
충북 보은군	166	219	31.9%
충북 괴산군	276	352	27.5%
충북 영동군	230	293	27.4%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전북 무주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160건)
경북 청도군	불법 광고물 신고 등(391건)
전남 완도군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등(341건)

교육청

- 1월 교육청 민원은 총 17,341건으로 전월 대비 24.3% 증가
-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인천, 세종, 제주 등 6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전북, 부산 등 11개 기관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인천	3,300	7,849	137.9%	광주	283	284	0.4%
경기	3,725	3,453	-7.3%	대구	296	260	-12.2%
서울	2,053	1,706	-16.9%	대전	351	260	-25.9%
경남	628	483	-23.1%	울산	233	246	5.6%
부산	647	453	-30.0%	세종	129	233	80.6%
제주	286	419	46.5%	충북	271	218	-19.6%
경북	424	389	-8.3%	강원	279	203	-27.2%
충남	362	387	6.9%	전북	256	176	-31.3%
전남	433	322	-25.6%	※ 1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사례]

인천교육청

검단 ◎◎단지 ◇◇초 배정 원안 유지 요구 등(7,849건)

제주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축소 철회 요구 등(419건)

세종교육청

◇◇유치원 기간제 교사 배치 시간 축소(6→4시간) 반대 등(233건)

공공기관등

- 1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43,0791건으로 전월 대비 21.3% 감소
- 국가철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민원이 전월 대비 증가, 감소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5,047	5,949	-60.5%
금융감독원	3,849	3,706	-3.7%
한국소비자원	3,089	3,005	-2.7%
국가철도공단	1,195	1,690	41.4%
한국전력공사	1,796	1,619	-9.9%
법원행정처	2,153	1,577	-26.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971	1,206	24.2%
대한법률구조공단	914	1,163	27.2%
국민건강보험공단	1,076	979	-9.0%
한국개발연구원	748	946	26.5%
한국제품안전관리원	872	929	6.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26	875	20.5%
한국철도공사	1,018	870	-14.5%
한국산업인력공단	2,453	817	-66.7%
한국도로공사	990	773	-21.9%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5.12월	'26.1월	증감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5	425	1,600.0%
한국주택금융공사	42	127	202.4%
주택관리공단	98	200	104.1%
한국가스안전공사	102	154	51.0%
인천시설공단	141	204	44.7%
한국에너지공단	111	159	43.2%
한국거래소	91	130	42.9%
국가철도공단	1,195	1,690	4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5	156	35.7%
한국부동산원	93	126	35.5%
한국수자원공사	236	311	31.8%
주택도시보증공사	363	463	27.6%
대한법률구조공단	914	1,163	27.2%
한국개발연구원	748	946	26.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99	373	24.8%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 안전 인증 관련 문의 등(425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천 □□단지 보금자리론 단지 규모 산정 방식 불만 등(127건)
국가철도공단	청량리 변전소 신설 반대 등(1,690건)

03 | 민원예보(2월) : 배달 음식

배달앱 및 배달 대행 이용의* 활성화로, 배달 음식 위생 불만,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 신고, 원산지 및 메뉴 허위 표시 신고 등 민원의 증가에 따라, 배달 음식 관련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검토를 위한 민원 분석 및 예보 실시

※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25.3.) : 배달앱 이용률 ’18년(18%)→’24년(31.7%), 배달대행 이용률 ’18년(5.4%)→’24년(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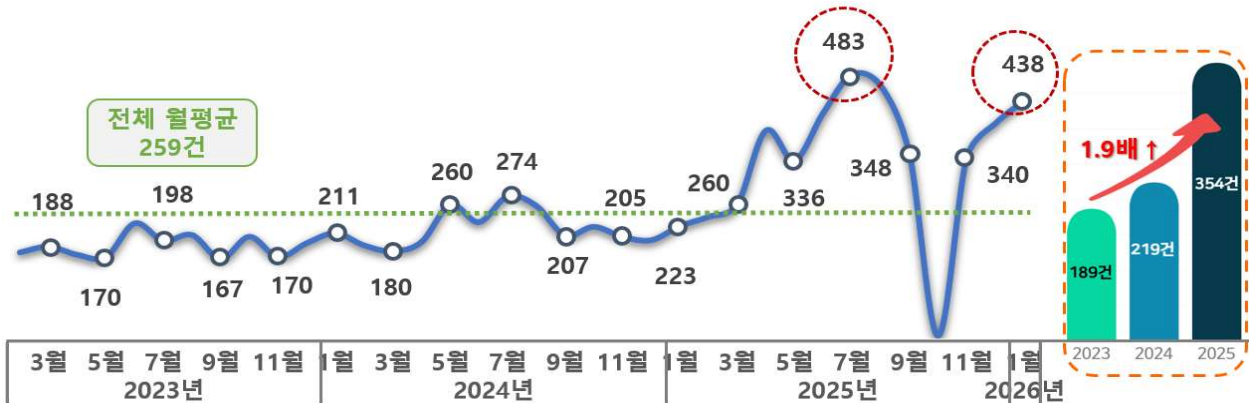
1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23.2월~’26.1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총 9,046건(월평균 259건)

- ’23년 2월 이후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로, ’25년 7월이 483건으로 가장 많음

* ’25년 ‘배달 음식’ 관련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23년(월평균 189건) 대비 1.9배 증가

〈 최근 3년간(’23.2월~’26.1월) 월평균 민원 추이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 (신청인) 남성(71.1%)이 여성(28.9%) 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9.3%), 40대(27.6%), 20대 이하(19.4%), 50대(10.5%)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4,667건(전체의 51.4%), 연령 정보 확인 가능 4,227건(전체의 46.5%) 대상

- (신청지역) 경기(27.1%), 서울(23.9%), 부산(10.3%), 인천(7.3%)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7,989건(전체의 88.0%), 민원의 처리기준이 아닌, 신청지역 기준임

- (처리기관) 서울시(21.9%), 경기도(11.8%), 경찰청(10.2%), 소비자원(6.1%) 등의 순

2 개선 방향

현재	개선 방향
▲ (음식 위생 불만) 배달 음식 및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 불만 등 신고 - 배달 음식에서 벌레·곰팡이·철수세미 등 이물질 발견 - 배달 전문 음식점의 폐쇄적 운영(홀미운영 등)으로 시설·종사자 위생관리 미흡, 식자재 관리 부실, 유통기한 위반 등 문제 발생 ▲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 식품 용기 사용 관련 법령* 위반 - 규정에 맞지 않는 포장 용기 사용에 따른 용기 훼손·파손으로 유해 물질 섭취 우려·불안 등 위생 문제 발생 * 「식품위생법」 (제8조),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원산지 및 메뉴 허위 표시) 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메뉴의 과장·허위 광고 사례 증가 - 수입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 실제와 다른 음식 사진 사용, 용량·구성 등을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 발생	▲ (위생 관리 강화)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점검·단속 강화 및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 배달 전문점 집중 점검·단속 등 방안 마련 필요 - 위반 음식점 신고 방법 절차 등 배달음식점 맞춤 신고 가이드라인 작성·홍보 - 주방 공개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 자발적 개선 유도 ▲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 단속 및 음식 표준 포장 가이드라인 교육 확대 - 위생점검 및 자가점검 시 포장 용기에 대한 세부 항목 추가 검토 - 음식 유형별(국물, 튀김 등)·메뉴별 포장 가이드라인 교육 확대 ▲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배달 전문 식당 맞춤형 정기·집중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 위반 및 처벌 주요 사례 등 교육·홍보를 통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위반행위 발견 시 필요 증빙자료 등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3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배달 음식 위생상태 불만]

- 짬뽕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을 비닐에서 꺼내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바퀴벌레 4마리가 순식간에 나왔고 2마리는 잡았지만, 2마리는 잡지 못해 집을 방역해야 합니다. 그동안 벌레 하나 없이 관리를 했던 자택에 바퀴벌레가 생길것 같아 매우 화도 나고 불안합니다.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면 배달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같이 배달되다니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조치바랍니다.('24.4.)
- 배달로 음식을 수령하였고, 제가 먹은 마늘, 고추에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너무 화가나 음식점으로 연락을 했는데 환불만 해주고 말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동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결 해야하는 음식점이 관리도 안되고, 보관 상태도 불량한 이런 음식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니요. 집중 점검부탁드립니다.('23.6.)
- 배달음식에서 철 수세미가 나왔어요. 철 수세미가 나왔다고 글을 올렸는데 사장님의 대처는 큰일 아닌 듯 너무 간단하시네요. 요즘은 배달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위생 관념이 없는 거 같네요. 철저하게 배달음식점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24.9.)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 음식 배달 기사입니다. 음식(물회)을 픽업하러 매장에 도착했는데 주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양파, 양배추가 쌓여있는 곳 바로 옆에 담배꽂초가 담긴 종이컵이 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불시위생점검 등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24.10.)

[식품 유통기한 위반 신고]

- 이 음식점에서만 상한 음식을 두 번째 받아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음식을 열자마자 떡갈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는 한입 먹어보니 완전히 음식이 상했습니다. 두 번이나 유통기한이 심하게 경과 된 상한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의심되어 매장 전체 식재료의 유통기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3.10.)

- 배달 받은 음식 중 콘샐러드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불쾌함과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매장 내 제품들에 대한 관리 소홀 등 확인 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23.3.)
- 8가지 업종의 배달음식점 한 곳에서 동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육회는 냉동 보관이 된다고 어마어마한 유통기간을 지난 재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또한 위생과 유통기한 불량합니다. 확실한 단속 바랍니다.(‘23.4.)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따른 불만]

- 배달 음식을 먹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 포장 용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배달 우려로 전부 폐기하였고, 플라스틱이 섞인 음식을 먹었는데 식당에서는 포장 시 온도 체크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점검바랍니다.(‘25.1.)
-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일회용 용기가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아서 아래쪽 부분이 다 찌그러졌으며, 환경호르몬 범벅된 음식을 아이가 먹었습니다. 식약처 위생인증 업체라고 나오는데 적합한 용기도 모르는 곳입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24.12.)

[배달 음식 허위광고 신고]

- 광고에 표시되는 사진과 전혀 다른 음식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진 및 메뉴를 보면 팔보 요리를 연상시키며 사진도 팔보채 혹은 팔보밥 등 볶은 것을 연상 시킵니다. 하지만 실제 배달된 것은 해물 짜장면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 식품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24.5.)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

- □□돼지김치찌침이라는 음식점에서 국내산김치라며 광고를 하고 있는데, 김치에 쓰는 고추가루는 중국산 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신고합니다.(‘23.9.)
- 앱 상 원산지표시란에 닭고기가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저급한 닭고기로 의심되는 제품이 배달되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24.7.)
- ◆◆식당’ 에서 ‘직화오징어볶음’ 메뉴를 배달 시켰습니다. 메뉴에 표기되어있는 원산지는 오징어(국산) 으로 표기 되어있었으나, 음식을 먹어 본 결과 페루산 대왕오징어를 사용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기만입니다. 정확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24.5.)

알림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반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1월)	운영성 주무관	044-200-7330
02. 기관별 동향(1월)		
03. 민원예보(2월)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